치매 주장 전두환, 골프 라운딩…“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하라”

■오늘 광주지법 8번째 재판

전씨측 헬기 조종사 5명 증인 요구
재판부 결단따라 불출석 취소 가능성
1년 넘긴 ‘느림보 재판’도 질타 쏟아져
“특혜·예우 없애야” 분노 목소리 확산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동혁 부장판사(형사8단독) 심리로 열리는 전두환(88)씨 8번째 재판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가 최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법정 불출석 허가, 1년 넘게 이어 지는 ‘느림보 재판’ 등 이른바 전씨에 대한 ‘재판 예우’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검찰도 이번 재판을 통해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취소 등 관련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의 결단에 따라 전씨가 다시 광주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에 대한 7번째 사자명예훼손 증인신문이 열린다. 전씨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의 쟁점인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며, 당시 군 지휘관 3명과 헬기 부조종사 2명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중 손모(당시 61항공단장)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4명은 불출석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전씨측은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당사자인 헬기조종사들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종사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5명 중 4명은 1995년 검찰조사를 이미 받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이 법정에 서더라도 진술을 신뢰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선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전씨의 불출석 재판 등에 대한 의견들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3월 11일 광주법정에 처음 출석한 이후 변호인을 통해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원거리 이동도 어렵다”며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로부터 선고 전까지 불출석 허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씨가 최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불출석 사유가 설득력을 잃으면서 불출석 허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재판부가 이미 선고 전까지 불출석 허가를 내린 상태인데다 재판일정도 막바지라는 점에서 불출석 허가를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과 함께 검찰이 관련 의견을 표명할 경우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공판검사가 (11일)법정에서 그 부분(불출석 허가 등)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느림보 재판’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재판부의 향후 재판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1년여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 이후에야 재판정에 겨우 출석하는 등 전형적인 ‘재판 끌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선 “일반 피고인이라면 이 같은 편의(불출석 허가)가 가능하겠느냐”라면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내놨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지난달 열린 광주지·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전씨의 ‘느림보 재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감 의원들은 “이미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목격 증언과 각종 기록·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는 데도 전씨를 지나치게 예우하다 보니,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두환씨가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은 서대문구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영상으로 전씨가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정의당 제공〉

“전두환 알츠하이머는 새빨간 거짓말…강제 구인해 재판정 세워야”

여야 골프 라운딩 비판…한국당 침묵
추징금 몰수·5·18법안은 국회서 낮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며 불출석해놓고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몰수 및 5·18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번 골프 라운딩 동영상으로 전두환 씨가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당장 강제 구인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재판조차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제 전씨를 강제 구인해서라도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전두환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마저 저버렸다. 법과 역사의 심판에 따른 단죄만이 답”이라며 “그가 발을 들일 곳은 골프장이 아닌 재판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씨의 알츠하이머 병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전씨는 건강함에도 국민과 법정을 기만했다. 사법당국은 강제 구인과 검찰 재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검찰은 전씨는 물론 그 비호 세력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고 정부 관계 기관은 5·18 관련 기록물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두환을 즉각 구속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 여전히 군사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 재추천을 1년 이상 외면하는 등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는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사후에도 추징·몰수하는 방안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안’과 전두환 전 대통령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추징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여전히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당의 반대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의 이슈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5당 대표회동 이어 19일 국민과의 대화

취임후 5번째 여야대표 청와대 초청
100분간 MBC 생방송 진솔한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을 갖는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국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집권 후반기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번째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지난 7월 18일 회동 이후 115일 만이다. 전날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이날부터 임기 후반기에 돌입하는 문 대통령이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협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만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만찬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데 대한 답례를 위해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됐다. 청와대는 정무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진정성 있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회동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의중과는 별개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정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 처리 문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골자로 한 대북정책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도 나선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일대일 대담 형식이 아닌, 다수의 질문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의 생방송에 나서는 것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 대변인은 “이 방송에는 국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BC는 300명의 국민 패널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MBC 공식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2019/index.html)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